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까지 한걸음 지역민 삶 '확' 바뀐다



40년 만에 광주·전남이 하나로 뭉치는 법적 근거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행정 통합이 현실화되면 단순히 시·도의 경계가 사라지는 수준을 넘어 예산과 권한, 정책의 틀까지 전면 재편된다. 산업 전략은 광주와 전남의 강점을 결합한 광역형 모델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복지 기준과 교육 정책, 의료 체계까지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이 하나가 되기까지 한걸음만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 후 지역민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짚어본다.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

특별법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행정통합 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86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인구 320만의 초광역 자치단체가 새로 설립되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맞는 분야는 행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각의 광역자치단체가 별도의 정책을 수립, 생활권이 겹침에도 정책은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나뉘어 추진돼 왔다.

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면 하나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의 일원화가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시·도 협의를 거쳐야 했던 사업들은 내부 조정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 광주 도심 교통 대책과 전남 인접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하나의 광역 교통 계획으로 묶거나,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연계한 개발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

혁신도시와 광주의 AI 인프라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플랫폼이 구축될 수도 있고, 전남의 농수산 생산 기반에 광주의 연구개발과 기공, 물류 기술이 접목돼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전략도 광역 단위로 재편되면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확대될 경우 정부 공모 사업이나 대기업 투자 위치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통합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다. 첨단 산업과 어너지 전환 산업이 결합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산업 혁신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전략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문제와 도시 과밀 학급 해소를 하나의 틀에서 조정하면 교육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의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해양·생태 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교육 확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산학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광역 단위 인재 양성 전략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나온다. 다만 교원 인사와 예산 배분, 교육 자치권 문제는 민감한 영역이다. 교육 행정의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머물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 분야 역시 통합 이후 구조적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광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지만 전남 일부 지역은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때문에 응급의료 체계 통합, 공공병원 확장,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강화, 원격의료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 정책 수립 등 행정 일원화 산업지형 재편 통한 대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기대 복지·교육·의료 등 지역별 격차 완화 '삶의 질' 향상

할 수도 있다.

예산 규모도 더욱 확대된다.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 최대 20조원)의 예산이 내려올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인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국가사업 유치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추진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청사와 조직 재편 등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산업지형 재편

산업 분야는 통합 후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광주는 인공지능(AI), 미래차,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 전남은 에너지·해상풍력·석유화학·농수산업 등 생산 기반과 자원 산업이 강점이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의 주요 산업의 시너지를 내 새로운 판도로 산업지형이 재편될 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공기업이 밀집한 나주

기준과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이 이뤄지면 복지 정책이 광역 단위 기준에 따라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복지 기준을 통일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광주에 집중된 문화·복지 인프리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농어촌 고령 인구 비중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된다.

예산 총액이 커질 경우 복지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통합 이후 복지 정책은 '확대'와 '균형'이라는 두 측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 격차 완화되나

교육은 행정 통합과 함께 가장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다.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 행정의 일원화 여부와 협력 체계 구

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광주에 집중된 전문 의료 자원을 전남 동부·서남권과 연계해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국립의과대학이 전남에 들어서게 되는 만큼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을 설립해 행정통합 시대에 걸맞은 권역 책임 의료 체계가 작동될 수도 있다.

특히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면 행정적 장벽이 낮아지고, 의료 정보와 서비스 연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행정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작업이 아니다. 정책의 기준이 달라지고, 산업 전략이 재편되며, 복지와 교육, 의료 체계까지 일상의 구조가 다시 짜이는 일이다. 변화의 방향에 따라 기대는 현실이 될 수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통합의 성패는 제도적 완성도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 속에서 가늠될 것이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컨설팅·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앞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선언문'을 기념촬영하고 있다.